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ZOOM IN

- 서울시, 설 앞두고 대부업체 고금리 영업 차단
-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상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인터넷쇼핑몰 평가결과, 종합쇼핑몰·도서·여행 분야의 만족도 높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나성조 sjna@seoul.go.kr

FOCUS I 01

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서울시는 '시장 공정성',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을 조성해 서울시를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로 추진한다.

지난 2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모여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기관들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 체결기관 : 총 14개

- 기업 계(2)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시민단체(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희망살림, 청년연대은행,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
- 금융 계(1) : 우리은행
- 상인단체(4) :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노동 계(1)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번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은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에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를 5월 중 제정·공포한다. 또한, 세부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내에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ZOOM IN I 01

서울시, 설 앞두고 대부업체 고금리 영업 차단

서울시는 설 명절을 전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고금리 영업 행위를 펼치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부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34.9%) 유효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말부터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시내 대부업체 3,081개소를 대상으로 34.9% 이자율 준수에 관한 일일 점검 및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1월 28일까지 1,714개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고금리 영업 등의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대부광고를 사전에 차단해 2월 2일(화)부터 2월 26일(금)까지 약 4주간 ‘불법 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이자율(최고 연 34.9%)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 필수 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불법채권추심 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때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ZOOM IN | 02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상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해 10월 한강의 새로운 밤 문화를 만들었던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된다.

서울시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상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인 정책토론회를 2월 3일(수)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 홀에서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개최 대상 지역의 주민과 상인, 작년 야시장 참가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상설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신지희 오니트(주) 대표가 ‘해외 야시장 활성화 사례를 통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어 이호진 방물단 대표가 ‘시민시장과 함께하는 야시장 상설화’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성남상공활성화재단 본부장이 ‘야시장 상설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발표한 후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도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한 열린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서울시 소셜 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이 가능했고, 의견을 내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정책방’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했다. 서울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현재 수립 중인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상설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시범 운영하면서부터 판매자, 방문객, 관계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준비해왔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서울시의 명물 야시장으로 육성되도록 힘쓸 것이다.

ZOOM IN I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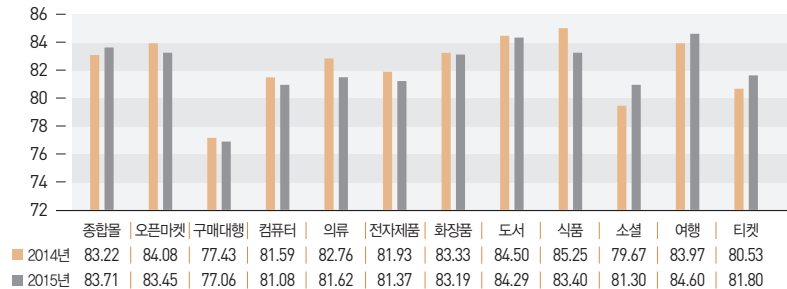
서울시 인터넷 쇼핑몰 평가결과, 종합쇼핑몰·도서·여행 분야의 만족도 높아

서울시는 소비자 이용이 빈번한 100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 이용만족도’, ‘소비자보호’, ‘소비자피해 발생’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종합몰 상위권,
소셜커머스·티켓분야
개선, 해외구매대행
여전히 부진**

2015년도 평가 결과는 지난해와 유사한 가운데, 여행·종합쇼핑몰·도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도에 다른 분야에 비해 낮았던 소셜커머스와 티켓예매 사이트에 대한 평가 점수는 2015년도에 다소 향상되었다. 반면 2014년도에 최하위를 기록했던 해외구매대행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14, 2015년 인터넷 쇼핑몰 평가결과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는 2014년보다 19.1% 증가한 53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터넷 쇼핑몰 평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일상화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불만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앞으로도 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